

# 헛갈리는 선거구제...투표지 1장에 1표만

### 광주 남구1, 북구1·2, 광산3 선거구 재편·의원정수 ↑ 나머지 광역의원 선거구별 1명씩...기초의원 각2~4인

동네 일꾼을 뽑는 6·3지방선거 광주·전남 각 선거구마다 막판 유세 열기가 뜨겁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광역·기초의원 선거구제 등에 대해 헛갈려하며 혼선을 겪고 있다.

투표 전 정확한 선거구 정보를 확인한 뒤 투표해야 유권자의 소중한 표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선거는 각 선거구는 기본적으로 1명씩만 뽑는 소선거구제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따라 해당 유권자 상당수는 헛갈린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기존 중대선거구제인 기초의원 선거까지 맞물려 후보를 분별하기 쉽지 않다.

이번 6·3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된 광주 광역의원 중대선거구는 ▲남구1(기존 소선거구 기준 남구1·2) ▲북구1(기존 북구1·2·3) ▲북구2(기존 북구5·6) ▲광산3(기존 광산3·5+비아동) 등 4곳이다.

남구1 선거구에서는 전남광주특별시의원 3명을 선출한다. 북구는 총 3개 선거구로 재편되며 북구1선거구에서 4명을, 북구2선거구에서는 3명을 선출한다. 광산3선거구에서도 의원 3명을 선출한다.

중대선거구에서는 각 정당이 복수

공천을 할 수 있다. 같은 정당 내 후보들은 고유한 당 숫자 기호에 당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가·나·다 등을 추가 기호를 붙여 분별한다.

예를 들어 4인 선거구인 북구1선거구에는 민주당이 후보 4명을 모두 공천했다. 각 후보들은 각기 1-가, 1-나, 1-다, 1-라 기호를 받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나머지 광주 동·서구 선거구와 전남 22개 시·군 각 선거구 광역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가 현행대로 유지, 선거구마다 1명씩 선출한다.

반면 광주 5개 자치구·전남 22개 시·군 단위 기초의회는 중대선거구제다. 인구 비례 등에 따라 확정된 각 선거구마다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을 뽑는다.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인구 증감에 따라 광주 자치구의회 중 동구를 뺀 4개 의회는 의원 정수도 늘었다.

서구의회는 4개 선거구에서 3명씩

총 12명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고 비례대표 2명을 뽑아 정수가 1명 늘었다. 남구의회도 지역구 의원 12명(가·나 선거구 각 3명·나선거구 4명), 정당대표에 따른 비례대표 2명을 선출, 의원 정원이 13명에서 14명이 됐다.

북구의회 역시 가·나 6개 선거구에서 각 3명씩 지역구 의원을 뽑고 비례대표로 3명을 선출하며 20명에서 21명으로 의원 수가 증가했다. 기존 18명이던 광산구의회에는 5개 선거구에서 3~4명씩 총 17명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2명이 임명한다.

반면 동구의회는 가·나 2개 선거구에서 각 3명씩 뽑고 비례대표 1명을 선출해 의원 정수 7명이 유지됐다.

전남 22개 시·군 의회도 인구 비례에 따라 각 선거구마다 2~4명을 뽑고 비례대표를 각기 1~3명을 뽑는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여수, 나주, 광양, 장흥, 무안 5개 시·군 의회 선거구가 조정됐다. /김도기 기자

## 민형배, 응급의료·교통 등 혁신 공약 시민효능감위원회·효능감지수·AI 맞춤형 행정 도입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1일 시민들이 통합특별시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3대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제시한 과제는 '응급실 뱅뱅이 없는 특별시'다. 전남광주 전역의 응급의료기관을 하나의 통합응급의료망으로 연결하고, 119와 병행, 응급의료기관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책임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에 대한 통합관제체계를 마련하고, 섬과 농어촌엔 닥터헬기와 소방헬기, 해경, 중환자 전담구급차를 연계한 일체 응급이송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과제는 전남광주형 통합공공교통 플랫폼 '올타(ALL-TA)' 구축이다. 버스, 철도, BRT, DRT, 택시,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해 시민이 출발지와 목적지만 입력하면 가장 빠르고

편리한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지막 과제는 '이동 점빵·돌봄 편의점' 사업이다. 편의점이나 마트가 없는 농어촌과 섬마을을 찾아가 생필품과 식료품을 공급하고, 복지상담과 인부 확인까지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민 후보는 이를 위해 '시민효능감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와 농민, 소상공인, 청년, 장애인, 어르신, 돌봄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를 시민 효능감을 높이는 기술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청년에게는 일자리의 주거 정보를, 어르신에게는 복지와 건강 서비스를,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맞춤형 지원을 먼저 연결하는 '찾아가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공언했다. /김도기 기자

## "광주 동구~화순 철도 연결" 혁신당·무소속 후보 '맞손'

광주도시철도 1호선 차량기지 매각 자금을 활용해 광주 동구와 화순을 잇는 철도를 건설하고 차량기지는 화순으로 이전하자는 공약을 혁신당과 무소속 후보가 공동으로 발표했다.

김성환 조국혁신당 광주 동구청장 후보와 김희수 화순군수 무소속 후보는 1일 광주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광주교통공사의 공공자산을 활용한 광주 동구~화순 철도 연결 구상을 공동 공약으로 제시했다. 동구 용산동 차량기지 16만5000㎡에 인근 6만6000㎡를 추가 매입해 21만㎡ 규모의 부지를 확보한 뒤 차량기지 부지를 3.3㎡당 700만원 인파에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투표분류기 시연 관람하는 국제선거관단

국제선거관단원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홍보관을 방문해 투표분류기 시연 및 설명을 듣고 있다.

## 버스킹·줍깅·자전거... '튀어야 산다' 광주·전남 이색유세



### 선거운동종료 이틀 앞두고 막판 표심 공략 후보들 저마다 개성 살려 유권자 접점 확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종료 이틀 앞두고 광주·전남 각 정당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저마다 개성을 살린 이색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 서구의회 가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기춘희 후보는 자신의 유세차량을 버스킹 공연 무대로 활용하고 있다.

기 후보는 유세차량에 올라 솔더키보드를 메고 자작곡을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방식으로 작은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산1선거구 진보당 국강현 후보는 대형 아바타 인형을 메고 다니며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이색적인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유세차량 대신 자전거를 선택한 후보들도 있다.

광주 북구의회 비선거구 출마한 손혜진 후보는 임간판을 부착한 전기자전거를 타고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주택가와 골목길까지 찾아가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환경을 고려한 선거운동도 눈길을 끈다.

광주 북구의회 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혜은 후보는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줍깅'(줍거나 달려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며 주민들과 만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동구1선거구 민주당 홍기원 후보도 산책로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임문영 후보 역시 최근 수완호수공원 줍깅 행사에 참여해 주민들과 만나고 보행환경 등을 살폈다.

반복적인 음원 송출과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을 줄이려는 후보들도 있다.

광주 광산구청장 재선에 도전한 민주당 박병규 후보는 무소속·경정소통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유세차량 위 연설 대신 주민들과 둘러앉아 대화하는 방식으로 생활 속 목소리를 직접 들겠다는 취지다.

나주시의회 마선거구 민주당 박소준·채성근·황우선 후보는 유세차량과 확성기 사용을 자제하는 '3무(無)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도기 기자

## 이정선 '24시간 돌봄·학력 향상' 공약 발표 지자체·지역사회와 연계...공공성·수월성 융합

이정선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 후보가 6·3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돌봄체계 확대와 학력 향상 등 전남·광주 교육 대전환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맞벌이와 부모의 사회적 여건 때문에 아이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지자체, 지역사회와 연계한 365일 24시간 완전 돌봄시스템을 가동하겠다" 밝혔다.

이 후보는 "평등한 교육복지를 지키는 것만큼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성과 수월성의 융합으로 학력 저하를 막고 교육청 진화진로책임제

를 구현하겠다"고 발표했다.

첨단 교육 시스템 구축과 글로벌 교육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맞춤형 학력 진단 시스템을 도입해 학습 성취도를 정확히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며 "해외 연수와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글로벌 교육도시 아시아의 보스턴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교육감의 자리는 특정 이념을 위해 투쟁하는 자리가 아니고 개인의 도덕적 과오를 방어하는 자리는 더더욱 아니다"며 "실용주의 정책 전문가 이정선이 전남광주의 교육을 대한민국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 김대중 "G20 연계 글로벌교육박람회 개최" G20 정상회의 2028년 대한민국 개최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 후보가 1일 2028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유치에 맞춰 대한민국 글로벌미래교육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8년 G20 대한민국 개최가 확정된 후 전남도가 전남·광주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G20과 글로벌미래교육박람회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번 박람회는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비전으로 전남·광주 전역을 무대로 2028년 5월8일부터 31일까지 24일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행사장 1곳과 보조행사장 3곳

을 비롯해 전남·광주 전역의 교육현장을 박람회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2024년 개최한 1회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에는 26개국에서 45만 7000여 명이 방문했으며, 박람회 성과를 미래형 2030교실로 이어가고 있다.

이날 김 후보는 교육주도성장을 통한 500만 메가시티 10만 인재양성 프로젝트 공약의 5대 실천 방안도 제시했다.

학교 교육환경 공개, 대학 및 기업 인재양성 연계, 국제 공동수업 추진, 현장 방문형 박람회 기획, 교육과 지역경제 상생 모델 구축 등이 다. /김 호 기자

## 종합특검 "尹, 2023년 11월부터 계엄 준비"

### "계엄 당일 실무진, 국회 병력 투입 문제 지적"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023년 11월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오는 6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출석 장면을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1일 경기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내란 혐의와 관련해 김병수 전 합동

참모본부 의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이 2023년 11월부터 준비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계엄 당일 다수의 실무자가 계엄선포와 국회 병력 출동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조언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특검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오는 6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지난달 21일 국가안보실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6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주 피의자 15명과 참고인 40명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

혹과 관련해 최근 대통령 기록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완료돼 선별된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 관련해 다수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다음백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당시 법무부 검찰 및 인사 담당자 3명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을 포함한 관계자 13명을 지난주 소환 조사했다. /뉴스

## 한화에어로 폭발사고에 여야 '선거운동 자제' "중대한 인명 사고" 유세 중단·축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총복 여야가 선거운동 중단과 자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잇따라 유세를 중단했고, 국민의힘은 차분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앙당 공지를 통해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정청래 대표는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고와 관련해 전국 민주당 후보와 캠프에 로고송 사용과 율동 금지 등 물론 전국의 모든 후보들에게 유세 중단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도내 단체

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이 선거 유세를 중단했다.

신용환 총복지사 후보 캠프는 이날 예정된 트럭 유세를 멈추고 로고송과 율동 조치를 전면 중단했다. 신 후보는 페이스북 글에서 "대전과 청주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근로자와 구조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한 인명 구조와 수습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청주시장 후보는 사고 소식에 전해지자 현장 유세와 유세차량 운영을 중단하고 선거사무소로 복귀했다